

방통위원장에 한상혁 변호사 내정…청문회 가시밭길 예고

한상혁 후보자 “가짜뉴스 규제 강화할 것”

오신환 “가짜뉴스 규제 위한 지명이라면 중립성·독립성 훼손”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내정됐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출신의 한 후보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는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미디어 전문가로 꼽힌다.

청와대는 8월 9일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장관급 8명을 교체하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방송·통신 이용자 편익을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대전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 중앙대학교 언론학 석사를 거쳤으며, 사시 40회로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과 방문진 이사를 맡은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언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디지털 방송과 인터넷TV(IPTV) 등에 대한 법제와 기구에

대해 들여다봤기 때문에 유료방송 분야에 대해서도 알고 또 방문진 이사를 지냈기에 방송의 공익성·공정성에 대한 식견도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청문회 문턱을 넘기까지 몇 가지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 중 부적격 인사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특히 조국·한상혁 후보자가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당 회의에서는 조국·한상혁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 및 쟁점이 될 만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한편 당 차원의 검증 전략을 구성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이중국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후보자의 발언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 오피스텔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미디어 공공성 강화에 힘을 쏟고,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와 극단적인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 보호의 범위 밖에 있다”면서 “해외의 사례나 법례를 보더라도 허위 조작 정보 규제는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기에 구체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의 발언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낸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바로 성명을 내고 “지금 방통위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과연 이튼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의 수립인가? 방통위가 이 문제를 주요 업무로 받아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논하자는 것이 합당한가? 지상파 비대칭 규제 해소와 종편 특혜 환수 문제가 방통위에서 재논의 해야 할 사안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정작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시급한 과제인 것처럼, 방통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추진이 보류된 사안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처럼 의견을 내놨다”며 “청와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답을 내놔야 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발끈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



©뉴스시스

에서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면 의도 자체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을 맞추는 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 곳이지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집중적으로 다뤄질 사안이 한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가짜뉴스 규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적한 현안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1년여의 임기만 남기고 떠났기에 과제를 다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방통위에는 지지부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비롯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의무편성폐지 등 종편 특혜 환수, 종편 재허가·재승인 심사 등의 현안이 있으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언급한 방송·통신 업무의 이원화 문제도 처리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백선하** baek@kobeta.com

‘내우외환’ KBS…지역국 구조조정 논란에 상위 직급 감축까지

방통위, KBS에 2개월 내 ‘상위 직급 감축안’ 제출 시정명령

내부에선 “지역국 구조조정 멈추고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 촉구

1000억 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KBS가 내우외환에 빠졌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내부 구성원들이 사측이 최근 마련한 비상경영계획 중 하나인 지역국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지역 방송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다한 상위 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 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해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KBS는 여러 난제에 휩싸였다.

방통위는 8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KBS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7년 감사원이 KBS의 상위 직급 비율 과다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재허가 의결 및 조건에 과다한 상위 직급 비율 감축을 골자로 하는 직제 규정의 정원표를 개정해 제출토록 했다.

감사원은 “KBS는 2직급 이상인 상위 직급이 전체 직원의 60%를 초과하는 등 ‘가분수형 인력구조’라며 “두 차례 상위 직급

을 정리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2~5직급의 정원을 통합 관리하면서 승진시키고 있어 상위 직급 과다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KBS는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6개월 내에 직제규정 정원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KBS가 또다시 이행하지 않자 이번에는 2개월 내 제출하라고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KBS 상위 직급 비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은 뒤 “방통위가 재허가 조건으로 감사원 지적 사항 이행을 6개월 이내 해소하라고 조건을 붙였지만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개선 노력이 미흡하고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과반수 노조의 합의 및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는 또한 초고화질(UHD)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10%)을 준수하지 않아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향후 편성 비율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올해 편성 비율을 준수토록 했다.

현재 KBS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은 경영악화로 프로그램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UHD 편성 비율도 지난해 10%에서 올해 15%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제작 여건이 여의치 않다. UHD 프로그램의 경우 UHD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제작비 및 인력 투입도 기존 HD 프로그램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UHD 방송의 제작 및 투자 여건 등을 감안해 지상파 UHD 방송의 편성 비율 산정 기준이 되는 ‘UHD 프로그램 인정 기준’의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지상파 UHD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반복 방송 및 재가공 프로그램 인정 기준 변경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UHD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UHD 신규 허가 심사 시에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예측이 나왔다”며 “지상파 UHD 대책을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BS 내부에서는 지역 방송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상경영계획에 따르면 KBS는 고정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TV, 편성, 송출센터 등 지역국 7개 일부 기능을 광역거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순천과 목포, 진주 등 7개 지역국의 핵심 기능을 광역 총국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지역 방송국에 대한 구조조정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정치권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비수도권 시청자들이 내는 KBS 지역 수신료는 전체 수신료의 53.4%로 절반을 넘고, 광고 수수량의 지역 기여 배분율도 평균 35%에 달함에도 KBS는 비수도권 지역을 비효율 지역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지역 방송국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13일 특보를 통해 “지역 방송국 광역거점센터 육성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이 나왔지만 지역 방송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절실함은 찾아볼 수 없고, 철학도 비전도 없다”며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마저도 뒤로 미루고자 하는데 과연 지역 방송을 활성화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역 내부 구성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의 깊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리”며 “단순히 지역 방송국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방안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KBS 노동조합도 “순천에서 본사 지역 정책실 주제로 열린 설명회에서 시민들의 야유가 이어졌다”며 “지역정책실의 설명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었다”고 꼬집었다. KBS 노동조합은 “지역국 기능을 줄여야 얻는 공적·사회적 이익이 구체적으로 분석돼 나온 것이 아니라 일단 줄여놓고 생각해보자 식”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지역국 죽이기 정책에 시청자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과기정통부 장관에 최기영 교수 내정

최 후보자 “日 수출 규제 기술 역량 확보로 대응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최 교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로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후 카이스트(KAIST) 대학원에서 전기전자공학 석사 학위를,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모교인 서울대에서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최 후보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한국이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증인”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으로 불거진 경제 분쟁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최 후보자 내정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최 후보자는 국내외 기업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학계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편”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며 “일본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 정책뿐 아니라 향후 국가의 미래 대전환을 성공적으

로 이루어낼 수 있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정책의 쇄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우선 소재 및 관련 기술의 자립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R&D 프로세스를 점검해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영민 전 장관의 지휘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네트워크, AI 등과 관련된 기초가 마련됐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후보자는 “과학기술 정책은 근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인 면도 소홀해선 안 된다

며 “혁신 기술은 기초과학의 토대 위에서 발전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기에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한상혁 후보자보다는 무난한 청문회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탈원전 지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및 한반도 대운하 정책 반대 등 과거 행적을 두고 코드 인사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실학회로 의심되는 국제학술단체에 연구논문을 기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과기정통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 “후보자 본인은 (일부 해외학회 검증 사이트에서 부실의심학회로 분류하고 있는) ‘국제 연구 및 산업연합 아카데미(IARIA)’ 관련 학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지도학생이 학회로부터 사



전 리뷰를 받고 참석해 논문을 발표한 정상적인 학술 활동이었다고 알고 있다”며 “다만 (지도학생이 참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실학회에서 운영하는 학술대회인 점을 인지하지 못한 점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백선하 baek@kobeta.com

수장 바뀌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유료방송 M&A 심사는?

시민단체 “지역미디어진흥기금 출연으로 지역성 보장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희망연대노동조합 등 153개 시민단체는 5월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유료방송 지역성 보호, 시청자 권익 실현 방안을 촉구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후임자가 내정됨에 따라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텔레콤과 티브로드 간 M&A 인가 심사 작업은 지난 6월 김상조 전 공정위 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

지부진한 상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3월 15일, SK 레콤은 5월 9일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와 최대주주변경승인 등을 신청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기본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현재 LG유플러스의 인수 심사는 최대 기간인 120일을

넘겼고, SK텔레콤 합병 역시 기본 심사 기간인 30일을 넘겼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6년과 달리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으나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의 수장이 바뀌는 과정이 반영돼 그런지 이번에도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그래도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4분기 중에는 공정위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두 업체 모두 M&A 인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서 김상조 전 위원장이 유료방송 M&A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한 바 있고, 과기정통부나 방통위에서도 큰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성이나 지역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부 인가가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지역성 약화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7월 30일 열

린 토론회 자리에서 김진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성과 다양성, 공적책임, 지역 일자리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없다면 ‘나쁜 인수합병’에 반대한다”며 제대로 된 심사를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2016년 공정위 불허당시와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시장 지배력 전이, 알뜰폰 문제” 등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 방송 시장의 경우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공익성, 지역성 등이 중요한 가치로 제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성 부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전국민언련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지역방송협의회, 지역방송협회 등은 8월 12일 성명서를 통해 “통신 대기업들은 ‘지역성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사로 면피하려 하지만 고용안정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행 방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

고, 벌써부터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외주업체의 횡포를 모른 척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역 미디어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방향성을 합병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역 미디어 전체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신 사업자들의 지역미디어진흥기금 출연이라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며 “확보된 재원을 통해 소규모 공동체 미디어와 지역 채널, 지역 지상파방송까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한다면 지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와 채널을 얻게 되고, 사업자는 공적책무를 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지역 방송은 무한 경쟁과 독과점의 폐해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받아 마땅하다”며 “정부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당사자인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美 CBS-비아콤 합병…넷플릭스, 디즈니에 도전장

“스트리밍 시장에서 입지 공고히 할 것”

미국 3대 지상파방송 중 하나인 CBS와 거대 미디어 그룹 비아콤이 합병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병은 AT&T의 타임워너 인수, 디즈니의 21세기폭스 인수에 이은 대형 M&A로, 넷플릭스와 아마존비디오 등이 독점하던 OTT 시장이 조만간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8월 13일(현지 시간) 미 CNBC 등에 따르면 CBS와 비아콤은 양사 간 합병 비율을 0.61:0.39로 하기로 합의했다. 비아콤 1주를 가진 주주는 CBS 0.5%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합병 가액은 120억

달러(약 14조 5300억 원)이며, CBS의 시장 가치는 180억 달러다. 외신들은 합병회사인 ‘비아콤CBS’의 가치가 300억~3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아콤CBS의 최고경영자(CEO)는 밥 바키시 비아콤 CEO가 맡게 된다. 조 이아니엘로 CBS CEO는 CBS회장을 맡으며 CBS 자산관리를 담당한다.

두 회사는 지난 1999년 합병했지만 이후 경영권 분쟁 등으로 2005년 분리됐다. CBS는 전통적인 지상파 채널로 뉴스와 스포츠 중계에서 방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아콤은 ‘아이언맨’,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제작한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세계 최대 음악 채널 MTV, 어린이 채널 니켈로디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CBS는 넷플릭스, 디즈니 등과 경쟁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미디어 기업 인수를 추진해왔다. CBS 역시 “스트리밍 시대에 다른 미디어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범 jnb1001@nate.com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및 편집인 | 월간방송과기술 이상규
편집주간 | 박재현
편집위원 | 김대환, 남윤석, 양창주, 이용학, 유익정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전숙희
인쇄인 | 김강(주)에스제이성전)
전화 | 02-3219-5637

발행소 | (우)07995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0층
트위터/페이스북 | @kobetajournal
홈페이지 | journal.kobeta.com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등록일 | 2005년 6월 20일
간별 | 주간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7 / kobetajournal@daum.net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ROADCASTING & TECHNOLOG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 세미나 및 기술 도서 안내문 발송
- KOB(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무료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 방법

- 2년 17만 원 / 1년 9만 원 / 6개월 5만 원
- 계좌 : 신한은행 100-030-515021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기술용어

리트랙터블 스마트폰

Retractable Smartphone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리트랙터블 스마트폰(Retractable Smartphone)의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리트랙터블 스마트폰은 일반 스마트폰과 같은 형태에서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 셔랍장을 빼는 것처럼 우측 스크린을 당기면 스크린이 펼쳐져 소형 태블릿PC 크기로 사용이 가능한 형태다. 이미 공개한 바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폰과 소형 태블릿PC의 장점을 모두 지원하는 형

태로, 삼성전자가 이를 위해 다양한 단말 디자인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을 스마트폰 크기로 사용할 때 일반 스마트폰과 같은 크기라는 점에 폴더블 스마트폰보다 장점이 있다.

전숙희 sh45@kobeta.com

출구 없는 지상파…자구책 마련에 골몰

‘계륵’ 월화 드라마 잠정 중단?…지상파 “다양한 방안 논의 중”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비상경영계획을 세우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KBS의 당기순손실은 3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억 원 늘었다. KBS가 최근 마련한 ‘KBS 비상경영계획 2019’에 따르면 올해 KBS의 사업손실은 1000억 원으로, 2020년 후반부터는 은행 차입금에 의존해 경영을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MBC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8월 1일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MBC는 올해만 900억 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MBC 영업손실은 12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한 수치다. 1000억 원 대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KBS와 MBC에 비하면 SBS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광고 매출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 적자 사이클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적자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지상파 3사는 먼저 월화 드라마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KBS는 기존 드라마 편성 시간을 기존 70분에서 50분으로 줄이고, 광고 비수기의 경우 예전 드라마 재방송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다. 월화 드라마의 경우 8월 5일 첫 방송된 ‘너의 노래를 들려줘’와 9월 방송 예정인 ‘조선로코-녹두전’ 이후 편성 작품이 없는 상황이다. KBS는 “월화 드라마 잠정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MBC는 KBS보다 더 빠르다. 8월 5일 첫 방송을 시작한 ‘월کم2라이프’ 이후 월화 드라마 편성이 없다. MBC 역시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나 확정된 안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MBC는 월화 드라마에 이어 주말 드라마 폐지도 검토 중이다. 현재 방영 중인 ‘황금정원’과 이후 방송 예정인 ‘두번은 없다’ 이후 주말 드라마 편성이 확정되지

않았다.

SBS는 이미 월화 드라마 대신 예능 프로그램인 ‘리틀 포레스트’를 편성했다. ‘리틀 포레스트’는 첫 방송인 8월 12일 같은 시간대 드라마를 꺾고 시청률 1위에 올랐다.

업계에선 월화 드라마를 계륵으로 표현한다. 한 관계자는 “드라마 자체에 상당한 제작비가 들어가지만 월화 드라마의 경우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포기할 수도 없고, 또 무작정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입장에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한류를 이끌었던 드라마는 방송의 ‘꽃’으로 불린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 경쟁력은 뚝 떨어졌다. 2017년 tvN ‘도깨비’가 케이블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긴 데 이어 2018년에는 JTBC ‘스카이캐슬’이 22.3%라는 시청률로 지상파를 압도했다. 이를 입증하듯 제55회 백상예술대상에서는 TV 부문

대상을 JTBC ‘눈이 부시게’의 김혜자가 차지했으며, 작품상은 tvN ‘나의 아저씨’가 받았다. 남녀최우수연기상 역시 tvN ‘미스터 션샤인’의 이병헌, JTBC ‘스카이캐슬’의 엄정아가 받았다. 대부분의 상을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이 가져갔으며 지상파 방송사의 작품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무작정 투자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MBC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만 해도 1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아이템’, 200억 원 대작 ‘이몽’, 기대작으로 꼽혔던 ‘더벡가’ 등이 줄줄이 시청률 부진을 겪었다. 업계 관계자는 “드라마는 투입되는 제작비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성적이 부진할 경우 부담이 크다”며 “MBC 상반기 적자에는 기대했던 드라마의 부진도 큰 몫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감축은 외주제작사와의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방송영상

제작사협회 등은 8월 13일 성명을 통해 “(KBS의) 일부 프로그램 폐지와 제작비 삭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협회 등이 공동성명을 내고 “광고 수익이 적은 시사교양 프로그램 위주로 프로그램 축소나 폐지, 제작비 삭감 등이 시작되고 있다”며 KBS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KBS는 14일 입장을 내고 “KBS와 외주제작사 간의 상생 협력을 왜곡·왜곡하려는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 다”며 “KBS는 ‘외주제작 협력 및 상생 지침’을 제정해 외주제작사를 동반 파트너로 존중하며 지상파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외주 제작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BS는 ‘다큐공감’ 폐지설에 대해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기획 과정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고, ‘그녀들의 여유만만’에 대해선 “폐지가 아닌 개편”이라고 답했다. 또 ‘시니어토크쇼 황금연못’ 제작비 삭감에 대해서는 “외주제작사와 합의에 의한 제작비 조정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백선휘 baek@kobeta.com

SBS 노조 “SBS마저 사모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것인가”

태영건설 2대 주주, 머스트자산운용 ‘경영 참가’ 선언…그 저의는?

태영건설의 2대 주주인 머스트자산운용이 경영 참여를 선언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그 저의를 두고 또 다른 ‘방송 개입’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태영건설의 2대 주주인 머스트자산운용은 사모펀드 운용사다. 머스트자산운용은 태영건설 지분을 12.12%에서 15.22%로 늘리고,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가’로 변경한다고 고지했다. 사모펀드가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가로 전환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머스트자산운용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선택에 따라 태영건설 그룹의 내재가

치와 시장 평가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경영에 참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SBS 노조는 “이는 곧 태영건설이 윤석민 회장의 2세 족벌경영 체제가 오히려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이어 머스트자산운용이 SBS에 대해 ‘단순한 장부상의 평가가치를 넘어서는 큰 무형의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지상파방송 SBS의 독립경영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면서 SBS에 대한 알은 인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윤석민 회장, 박정훈 사장과는 달리 SBS의 ‘큰 무형의 가치’를 언급한 것이 눈에 띄기는 한다”

고 평했다.

그러나 이러한 머스트자산운용이 움직임이 “SBS에 대한 머스트의 언급은 향후 태영건설을 통한 노골적인 경영간섭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라고 그 의미에 대해 경계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이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전환을 요구하고 SBS 미디어홀딩스와 관련 계열회사들에 대한 구조 변화 등을 언급한 것에 주목한 것이다.

태영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태영 지주사-태영건설-SBS미디어홀딩스’의 구조가 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법상 지주회사가 지주회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SBS홀딩스는 자회사인 SBS의 지분을 100%를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법상 특수관계자가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4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지주회사 전환이 이뤄질 경우 태영건설이 SBS미디어그룹 자체를 매각하거나 SBS미디어홀딩스의 지주회사 체제를 해체하고 태영건설이 SBS를 직접 지배하는 예전과 같은 구조로 돌아가게 된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이러한 결과에서 머스트자산운용이 직간접적으로 SBS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주의하고 있는 것이다.

SBS 노조는 “SBS는 일개 사모펀드

파위가 자본 이익을 마구 쥐어짜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혹여라도 태영건설 경영 참가를 통해 SBS를 넘보려는 선부는 수작을 부린다면 노동조합은 물론 시민사회 전체의 엄청난 저항과 끝장투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아울러, SBS 노조는 “SBS를 다시 태영건설의 비서로 만들려는 윤석민 회장의 선부는 불장난이 초래한 노사관계 파탄에다, 정체불명의 사모펀드까지 SBS를 호시탐탐 노리는 작금의 상황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독립 경영 체제 확립’을 통해 구성원과 조직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왜 이 시기에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방송 독립’에 대한 공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전숙희 sh45@kobeta.com

방통위, EBS 송신 지원 구체화 방송법 개정안 의결

KBS-EBS, 합의 도출 실패…‘대통령령’을 따르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EBS에 대한 KBS의 송신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구체화한 ‘방송법 개정안’을 8월 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54조에서는 KBS의 업무 중

하나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원을 한다는 것뿐 구체적 내용이 없어 지원 범위를 두고 양측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갈등을 벌여왔다.

방통위는 지난 2016년 11월 KBS에 UHD 방송을 허가하면서 EBS와 UHD 송신 지원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KBS는 합의 결과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방통위의 중재와 국회, 감사원으로부터의 지적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법을 통한 문제 해결에 이른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행령 위임규정을 제54조제4항 ‘제1항제6호에 따른 송신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신설해 구체적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을 따르도록 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4월 24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보고하면서 “입법 기술상 매우 단순한 개정 안건”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자구 심사 등을 거친 후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전숙희 sh45@kobeta.com

“무책임한 JIBS 경영진을 규탄한다”

“대주주 선언식 회장 손 떼야 지역민 신뢰 회복 가능”

JIBS제주방송 경영진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8월 7일 회의를 열고 ‘JIBS 8뉴스’의 ‘화창한 주말 나들이객 북적’ 리포트에 범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건의했다. 해당 리포트는 3월 30일

보도된 JIBS제주방송 대표이사인 선언식 회장 소유의 테마파크 개장식 관련 기사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JIBS제주방송지부는 8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입장 발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여론이 들끓고 나서야 고작 보도제작본부장과 보도

국장의 보직사퇴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려는 사측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선언식 회장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경영진은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해 공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역민영방송 노동조합협의회도 16일 성명을 내놓았다. 지역민방 노조협의회는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로 인해 JIBS 제주방송에서 낮부끄러운 방송 참사가 벌어졌다”며 “지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방송 사유화에 앞장선 대주주 선언식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협의회는 “관계자 징계와 ‘경고’라는 고강도 중징계로 지상파 방송사로서 받을 신뢰도 추락은 치명적임에도 경

영진의 대치는 너무나도 안일하다”며 “아무리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과 여론의 다양성을 목 놓아 외쳐도 ‘방송 사유화’로 인한 방송의 공정성 훼손은 지역민의 외면을 부추긴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노조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향후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주주를 포함한 경영진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진범 jnb1001@nate.com

KOBASHOW 2020



제30회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30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2020.05.13-15
COEX, SEOUL

www.kobashow.com

주 최 한국이앤엑스·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원(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서울특별시·KOTRA·KBS·MBC·SBS·EBS·OBS·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음향예술인협회·한국음향학회

특별후원 CBS·아리랑국제방송·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



강원권 지역교육

1. 교육 목적

- 지역 방송기술인의 기술 및 정책적 직무능력 향상 도모
- 미디어 환경 변화 및 UHD TV 등 차세대 방송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를 통한 지역 우수 방송기술 인력 양성

2. 교육 일정

교육 일정: 2019.08.27(화), 총 1일

교육 대상: 지상파 방송기술인

교육 장소: KBS춘천방송총국 8층 대회의실(강원 춘천시 방송길 109 소재)

3. 접수 방법

8월 19일(월)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edu.kobeta.com)를 통한 선착순 접수 및 현장 접수

4. 기타

교육비: 무료

담당자: 민서진 과장, 송수정 사원

문의사항: 02-3219-5640~1

E-mail: bea@kobeta.com



차세대 방송을
선도하는 방송기술인!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방송기술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http://edu.kobeta.com>

